

# 인터넷, 태도극화, 그리고 지방선거: 제6회 지방선거의 투표행태 분석

이상신\*

## | 목 차 |

I. 들어가며	3. 정치변수
II. 이론과 가설	4. 통제변수
III. 데이터 및 변수	IV. 분석
1. 태도극화와 일관투표	1. 태도극화와 일관투표의 기초 분석
(1) 태도극화	2. 태도극화와 인터넷
(2) 일관투표	3. 일관투표 결정요인 분석
2. 인터넷 이용	V. 토론 및 맺음말
(1) 인터넷 정치정보	
(2) 인터넷 이용 빈도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터넷이 한국 정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인터넷 사용이 태도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이른바 변화가설(change hypothesis)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 온라인 여론의 진보 우위 현상이 6회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회귀분석한 결과, (1)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소통은 시민들의 기존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태도극화의 가설이 다시 확인되었고, (2) 한국의 온라인 여론은 아직까지는 보수정당에 비판적이라는 변화가설의 예측이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진보정당의 우위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주제어: 태도극화, 인터넷, 한국 지방선거, 변화가설, 정상화가설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중점교수.

##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터넷이 한국 정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첫째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좀 더 관용적이고 열린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혹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이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같은 대화만을 반복하며 결국은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는 “메아리방(echo chamb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한다(Gruzd & Roy 2014; Prior 2013). 둘째 질문은 한국의 선거 현실에 대한 인터넷의 구체적 영향력을 묻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 매체, 특히 SNS 사용자들이 좀 더 진보적이며 투표에 있어서도 보수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러한 진보편향성이 6회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사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또 다시 이 질문들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과 인터넷이 기반한 새로운 미디어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으며, 그것에 반응하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시민들의 행태도 그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진화 중이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인터넷과 뉴미디어가 선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쌓인 연구도 상당한 분량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빠른 변화속도 때문에, 아무래도 현상을 고찰하고 일반화하여 이론을 만들어야 하는 연구자들은 이 변화에 한 발 뒤처지고 있는 감이 있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가 노무현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강원택 2004a; 김용호 2004; 김용철·윤성이 2000; 윤성이 2003). 이런 노사모식 인터넷 정치참여는 2000년대 중

반 이후 이른바 웹 2.0과 UCC(User Created Contents)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이를 통해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를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김용철 2008; 송경재 2008, 2009; 이상신 2012). 촛불시위 이후 인터넷의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가장 최근까지 받은 주제는 역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였다. 특히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트위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했다는 연구들이 주목 받았다(김윤실·윤종빈 2012; 박상호 2012; 허재현 2011).

그러다 지난 2012년 대선부터는 스마트폰에 기반한 메신저 서비스, 즉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연구자들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그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지지자 동원에 항상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새누리당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성공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정치의 세력 지형을 개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에 기반한 선거 캠페인은 사용자들의 사적인 통신을 이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직 이에 관련한 본격적인 경험적 연구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세월호정국’과 6.4 지방선거 그리고 7.30 재보선에서는 보수집단이 카톡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심분 활용했고, 이를 통해 여론지형을 [뒤집었다]”(박연주 2014).

이렇게 변화하는 인터넷과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인터넷이 유권자의 의식과 선거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계속 다시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6회 지방선거 직후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에 정치정보를 의존하는 유권자들은 좀더 극단화된 태도, 즉 태도극화(attitude polarization)의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른바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론이다(나은영 2006; 노정규·민영 2012; 이상신 2013; Baum & Groeling 2008; Farrell 2012; Stroud 2010). 또, 지방선거에서의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일관투표(straight-ticket voting) 경향을 비교해본 결과, 인터넷 사용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지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고연령층과 저소득, 저학력층에게도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 대응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기존 연구들을 리뷰하여 이 논문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확인하고 가설을 소개할 것이다. 이어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변수들을 소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순서로 이 논문을 구성하였다.

## II. 이론과 가설

로드와 그 동료들은 실험을 통해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연구했다(Lord et al. 1979). 그들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에게 사형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나열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 후, 이 피실험자 집단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측정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내용의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집단 모두 기존의 태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사형제도 찬성파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졌으며, 똑같은 연구결과를 읽은 반대파들은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를 더욱 반대하게 되었다. 로드와 그 동료들은 이러한 변화, 즉,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태도가 어떤 계기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태도극화(attitude polarization)라고 정의했다(Lord et al. 1979, 2099; Miller et al. 1993, 561 참조). 그 후 어떠한 조건하에서 태도극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개인들이 자신의 태도에 대해 숙의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될 때 기존 태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있다(Fazio et al. 1982; Wojcieszak 2011).

이 태도극화 현상은 민주적 정치 숙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민주주의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시민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기존 견해와 상충하는 이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정치적 숙의 과정에서 이성적 민주시민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토론 속에서 스스

로의 견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을 요구 받는다. 이러한 공론장 속에서의 숙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Gutmann & Thompson 1996). 그러나 심리학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들은 그 반대의 경향을 예측한다. 사람들은 이견에 노출될 때 자신의 견해를 반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태도를 강화하고 극단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Nickerson 1998 참조; Wojcieszak & Mutz 2009; Wojcieszak et al. 2010; Wojcieszak 2011).

이 태도극화이론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을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이다. 강화이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념, 주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이준환 2014; Davis 1999; Xenos & Moy 2007). 인터넷에서의 태도극화는 인터넷이 매체로서 갖는 특징, 즉 쌍방향성 때문에 일어난다. TV나 신문 등의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인터넷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또,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러한 쌍방향성의 특징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견해와 충돌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의 가능성을 높인다(Iyengar & Hahn 2009; Prior 2013; Stroud 2010; Sunstein 2007). 또, 자신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다는 인터넷의 특성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히려 그 태도를 강화시킬 것이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이나 기타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소통에서 태도극화와 선택적 노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김승수 et al. 2008; 김은미·이준웅 2006; 나은영 2006; 나은영·차유리 2012; 최윤정·이종혁 2012; Baum & Groeling 2008; Lawrence et al. 2010; Muhlberger 2003; Stroud 2010).

이렇게 인터넷 사용이 태도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최근의 한국 여론 연구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다. 조성대(2013)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SNS에서의 교류의 폭이 넓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보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밝혔다. 이러한 “네

트위크의 교차성”은 좀 더 활발한 정치참여와 정치인들과의 온라인 교류, 그리고 정치 숙의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닌 개인들이라도 “결국 정치 정보 및 숙의활동은 ‘끼리끼리’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선택적 노출효과를 발견하기도 했다(조성대 2013, 180).

또, 이상신(2013)의 연구는 SNS 사용 및 정치적 대화에 대한 빈번한 참여가 대통령 후보 평가에 있어서의 태도극화 현상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즉, SNS를 자주 사용할수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정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할수록 관대하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되는 대신 오히려 대선 후보에 대한 기존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인터넷 사용이 개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른바 ‘변화가설(change hypothesis)’과 ‘정상화가설(normalization hypothesis)’을 재검증해 보는 것이다. 변화가설은 인터넷의 쌍방향적 특징과 낮은 정보비용 등의 특징이 선거에 있어 소수 정당 및 열세후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윤성이 2007; 조희정·박설아 2012; 윤성이 2001; Grossman 1995; Rash 1997). 이에 비해 정상화 가설은 인터넷 보급 초기에는 소수 정파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세를 점할 수 있으나, 기술적 혁신과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편적인 확산 등으로 인해 결국에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다수 정파 또한 인터넷에서의 수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김용철·윤성이 2005; 조희정·박설아 2012).

한국적 상황에서 온라인의 여론은 진보정당 및 후보에 유리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의 거의 일관된 결론이었다. 예를 들어 장덕진(2011)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선 기간의 트위터를 분석하여 한나라당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의 여론은 보수 정당에 매우 비판적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의 정치인들도 트위터를 통해 소통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았지만, 이들의 팔로워 수나 리트윗 개수는 진보정당의 정치인들과 비교해 매우 뒤쳐졌다. 트위터의 팔로워 수를 비교했을 때 진보

신당 정치인들은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21.4배,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4.89배, 민주당이 2.36배로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자원과 여당으로서의 우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공간에서는 진보적인 목소리가 우세했다. 트위터에서 소통되는 내용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정부비판적인 내용이 많았다(장덕진·김기훈 2011). 트위터의 영향력이 특히 주목받은 선거 중 하나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는데, 이 선거와 관련되어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트위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연구들이 있다(김윤실·윤종빈 2012; 박상호 2012).

이와 관련, 한국적 맥락에서 트위터의 정치적 동원기능을 연구한 박창문(2013, 215)은 “트위터 네트워크의 이념적 성향은 심각한 ‘친야·반여’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일권(2012, 57)은 SNS를 통한 정치참여가 “이견(異見)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주장만을 표현하는 일방적인 측면”이 강하며, 이러한 편향성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분파적 정치인들이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마찬가지로 이준한(2014)의 연구에서도 뉴미디어의 진보적 성향을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가 발견되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권자 동원과 투표 선택을 연구한 이 논문에서 이준한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사용, SNS의 이용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대신 인터넷 사용자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 확률이 낮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대한 보수정당의 반격도 결코 만만치 않다. 윤성이(2007, 21)는 2002년 대선과정에서 노사모의 활약과 2004년 탄핵사태 이후 충격을 받은 보수진영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진출을 200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지적한다. 이미 “2007년 대선 시점에 이르러 ‘인터넷은 곧 진보’라는 공식은 깨진지 오래”되었고 많은 우익 웹사이트들이 온라인에 진출하면서 힘의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2012년 대선과 2014년의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보

수진영의 온라인에서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박연주 2014; 정용인 2012). 여기에 인터넷의 대중화로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노년층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동참하는 추세라는 것도 이러한 변화된 온라인 정치지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80.3%에 달했고, 60대의 인터넷 이용률도 41.8%로 상당히 높았으며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이렇게 인터넷과 뉴미디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각 정당과 유권자 또한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진보정당에게 유리하고 보수 집권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변화가설이 2014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하는 두 가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 1> 인터넷 사용이 태도극화를 심화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각 정당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태도극화를 조작적 정의한다. 인터넷과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주요 정치적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심한 태도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 정치적 목적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인터넷 접속 빈도가 높은 사람들의 태도극화도 높을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가설 2> 인터넷 사용은 새누리당 지지를 약화시키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까지 온라인 및 SNS 공간은 상대적으로 진보정당과 정치인들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일관투표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터넷 사용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여 이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 Ⅲ. 데이터 및 변수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의 “2014년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총 1,210명의 표본을 상대로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은 지방선거 약 3주 후인 2014년 6월 25일에서 7월 17일 사이의 총 23일간이었다. 표본추출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 1. 태도극화와 일관투표

##### (1) 태도극화

정당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태도극화를 측정했다. 우선, 19대 국회에서 원내에 의석을 갖고 있는 각 당들(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대한 선호를 100점 만점으로 측정했다(0-매우 부정적, 50-중립, 100-매우 긍정적). 각 당의 평균 선호도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기술된 바와 같다. 가장 선호점수가 높은 것은 새누리당이었고, 가장 낮은 당은 정의당이였다. 각 당들의 선호점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 < 0.001$ ).

<표 1> 정당별 선호점수 및 표준편차

	새누리	새정치	통진당	정의당
평균	47.45	42.69	27.40	25.65
표준편차	25.44	20.51	21.01	21.09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당의 선호점수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당의 선호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태도극화 변수를 계산했다. 예를 들어 한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당이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에게 60점을 준 반면, 가장

싫어하는 통합진보당을 20점으로 평가했다면 이 응답자의 태도극화 점수는 40이 된다. 전체 1,209명 응답자의 태도극화 평균은 36.93이었으며 표준편차는 24.70이었다.

## (2) 일관투표

기존의 분할투표 혹은 일관투표 연구는 대부분 전략적 투표로서의 분할투표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기 다른 당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측정했다(강원택 2004b, 2010; 경제화·김재한 1999; 김형철 2012; 박찬욱 2004; 조진만·최준영 2006; 한상익 2014). 이렇게 측정할 경우에는 결국 이진변수(binary variable)로 분할 혹은 일관투표를 계측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각급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일관투표 변수를 생성하였다. 즉,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 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지역구,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6개 선거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하나의 정당을 지지했는지를 측정했다. 일반적인 선거 연구에서는 각 당에 대한 지지를 이진변수로 작성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투표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의 확률을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처럼 등간척도(interval scale)의 성격을 갖는 일관투표 변수를 사용하여 각 당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면 좀 더 지지에 대한 특성과 결정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여당 지지를 기준으로 한 새누리당 일관투표 변수와 야당 지지를 새정치민주연합 일관투표 변수를 만들었다. 두 변수는 모두 최솟값이 0이며 최댓값이 6이다. 즉, 6개 선거에서 모두 새누리당을 찍었다면 새누리당 일관투표변수의 값은 6, 한 번도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면 0이 된다. 전체 응답자의 30.7%인 372명이 6개 선거 모두에서 새누리당에 투표했으며,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모두 일관투표한 응답자도 268명(22.2%)이 있었다. 이를 합하면 총 응답자의 52.9%인 640명이 새누리당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일관투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인터넷 이용

### (1) 인터넷 정치정보

인터넷 정치정보 변수는 응답자들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매체를 통한 정보에 가장 의존하는가에 대한 변수이다. 응답자들이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자 정당을 결정할 때 의존하는 중요한 정치정보 매체를 2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한 후, 이 중 ‘인터넷(포털, 블로그)’이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혹은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밴드)’를 중요 매체로 뽑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진변수를 작성하였다(1=인터넷 정치정보 이용, 0=기타 매체 정치정보 이용).

<표 2> 매체별 정치정보 의존도

	인터넷	지상파	중편	신문
이용	32.5% (393)	84.4% (1021)	52.5% (635)	20.9% (253)
비이용	67.5% (817)	15.6% (189)	47.5% (575)	79.1% (957)
전체	100%(1210)	100%(1210)	100%(1210)	100%(1210)

전체 응답자 중 32.5%가 인터넷을 중요한 정치정보 매체 중 하나로 평가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치정보 매체는 지상파 TV로, 응답자 거의 대부분인 84.4%가 지상파 TV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중편TV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아서 인터넷보다도 높은 52.5%였다. 신문을 중요한 정치정보 매체로 꼽은 사람은 20.9%에 그쳐 신문의 영향력이 계속 줄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Iyengar 2011, 116).

### (2) 인터넷 이용 빈도

인터넷 정치정보 변수가 인터넷을 정치정보 매체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이진변수라면, 인터넷 이용 빈도는 정치적 목적 이외에도 일반

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평소에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를 묻고 이를 인터넷 이용 빈도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 인터넷 이용 빈도

	빈도	비율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361	29.8%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41	11.7%
일주일에 1-2일	149	12.3%
일주일에 3-4일	90	7.4%
매일 1시간 이하	264	21.8%
매일 2-3시간 정도	107	8.8%
매일 3시간 이상	98	8.1%
전체	1,210	100%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 중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9.8%였다.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 인터넷 이용률을 82.1%로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좀 높은 편이다(2014, 23). 그러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을 만3세 이상 인구로 잡고 있는 점, 그리고 저연령층에서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sup>1)</sup>을 생각하면 이러한 차이는 이해될 만한 수준이다. 전체 이용자들의 41.6%는 일주일에 1-2일에서 매일 한 시간 이하 정도의 빈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하루에 2-3시간 혹은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16.9%에 달해서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었다.

### 3. 정치변수

이용자들의 정치성향을 보기 위해서 정치변수로 이념과 정당일체감을

1) 3세에서 9세 사이의 집단에서는 이용률이 80.1%,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에 달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6).

측정하였다. 우선 이념은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척도(self-report scale)이며 11점 척도로 구성되었다(0=매우 진보, 5=중도, 10=매우 보수). 약 40.9%의 응답자가 중도 이념이라고 답하여 진보와 보수보다는 역시 중도에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모여 있었다.

정당일체감은 2단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선 첫 번째 문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를 묻고, 이 중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다음 단계 문항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다. 첫 번째 문항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도 다시 한번 “귀하께서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좀 더 정확한 정당일체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지정당이 있는가를 묻은 처음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55.0%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해서, 정당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필터링 과정을 거쳐 선호정당이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을 32.0%까지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측정된 응답자들의 정당일체감 분포는 <표 4>와 같았다. 새누리당 지지자는 전체의 38.3%,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25.9%였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지지자는 모두 합쳐도 3.2%에 그쳤다.

<표 4> 정당일체감

정당일체감	백분율 t	빈도
새누리당	38.3%	462
새정연	25.9%	312
통합진보당	2.1%	25
정의당	1.2%	14
기타정당	0.7%	8
선호정당없음	32.0%	386
전체	100%	1,207

이렇게 측정한 정당일체감 변수를 기준으로 새누리당 지지자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를 표시하는 두 개의 이진변수를 작성하였다.

## 4. 통제 변수

이 밖에 통제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성별, 지역주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령 변수는 응답자들의 만 연령을 사용하여 코딩하였으며, 교육 수준은 무학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까지 8점 척도로 나누어 측정했다. 소득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는데, 200만원 미만에서 850만원 이상까지 15점 척도로 측정하여 코딩했다. 성별은 이진변수로, 1=남성, 0=여성의 값을 갖는다. 지역주의 변수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 영남 및 호남 지역 거주를 표시하는 이진변수 두 개를 각각 만들었다. <표 5>에선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들의 개요를 정리하였다.

&lt;표 5&gt; 변수 일람

	설명	평균	표준편차
태도극화	최고 선호 정당 - 최저 선호 정당	36.93	24.7
새누리당 일관투표	6개 지방선거중 새누리당 지지 숫자	2.26	2.73
새정치 일관투표	6개 지방선거중 새정치 지지 숫자	1.84	2.55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빈도	인터넷을 중요한 선거 정보 매체로 이용 여부	1=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 ; 0 = 미이용	
	인터넷 사용시간. 7점 척도	3.39	2.05
이념	0=매우진보 ; 5 = 중도 ; 10 = 매우 보수	5.01	1.77
새누리 지지	새누리 지지 이진변수	0 = 기타 ; 1= 새누리 지지	
새정치 지지	새정치 지지 이진변수	0 = 기타 ; 1= 새정치 지지	
연령	응답자 만연령	45.74	15.89
교육	1=무학; 3=중학교; 8 = 대학원 박사 과정 이상	4.41	1.35
소득	1=200만원 미만; 15=850만원 이상	5.14	3.46
성별	이진 변수. 1=남성 ; 0=여성		
영남	이진변수. 1=영남 거주; 0=기타		
호남	이진변수. 1=호남 거주; 0=기타		

## IV. 분석

### 1. 태도극화와 일관투표의 기초분석

이 절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인 태도극화와 일관투표의 기초적인 분포를 각각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 6>에서는 인구학 변수에 따른 집단 간 태도극화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6> 인구학 변수별 태도극화 분산분석(ANOVA)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성별	여성	36.56	24.31	613	0.28
	남성	37.31	25.12	596	
학력	중졸이하	45.39	23.06	226	16.76***
	고졸	35.23	24.86	507	
	전문대 이상	34.74	24.48	476	
연령	19-29세	29.24	24.98	218	24.46***
	30-39세	29.39	23.62	234	
	40-49세	36.66	23.53	257	
	50-59세	40.86	23.88	243	
	60세이상	46.88	23.10	257	
월소득	200만원미만	43.01	24.71	214	5.91***
	200~299만	39.18	24.85	198	
	300~499만	34.80	23.79	517	
	500~699만	35.88	25.34	210	
	700만원 이상	30.54	26.02	67	
지역	서울	35.87	26.41	240	5.23***
	인천/경기	40.54	25.34	351	
	대전/세종	37.02	21.68	129	
	광주/전라	26.58	21.51	125	
	부산/울산	37.36	22.70	127	
	대구/경북	38.41	24.44	189	
강원/제주	35.63	26.17	48		

\* P < 0.05 \*\* P < 0.01 \*\*\* P < 0.001

우선 태도극화에서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인구학 변수 집단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의 태도극화가 45.39로 가장 높아서, 학력이 낮을수록 태도극화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태도극화는 선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 60세 이상의 노령층의 태도극화가 가장 심해서 46.88이었고, 나이가 어릴수록 태도극화 점수가 낮았다.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경향이 쌓이고 이에 따라 좀 더 관대하고 중용에 가까운 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소한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는 한국의 노령층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호오가 분명했다. 이렇게 연령 혹은 세대와 태도극화의 상관관계는 지난 2012년 대선과 관련된 태도극화 연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이상신 2013, 232).

월 소득으로 측정된 경제력에 따라서도 집단 별로 태도극화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저소득층의 태도극화가 높았으며,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태도극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응답자의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태도극화를 비교하여 지역주의와 태도극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의외로 가장 태도극화가 낮은 지역은 광주/전라권역이었다. 경남 및 경북권역의 태도극화가 각각 37.36과 38.41로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응답자들보다 높았지만, 서울(35.87)이나 인천/경기(40.54)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고는 보기 힘들었다. 뿌리 깊은 지역주의가 한국의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강원택 2003, 2008, 2012; 박상훈 2001, 2013), 최소한 정당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태도극화를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영남이나 호남 출신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태도극화를 보인다고 말할 근거는 찾기 힘들었다. 이것은 2012년 대선에서의 태도극화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이상신 2013, 235).

이 연구에서는 태도극화를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 즉,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를 이용하여 — 측정하였는데, 태도극화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한 결과 경북 지역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 응답자들보다 태도극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대선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 차이는 아마도 태도극화의 측정방식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경북 지역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이 지역 출신 응답자들의 태도극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후보가 아닌 정당 선호로 태도극화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태도극화의 지역별 차이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었다.

<표 7> 정당일체감 및 이념별 태도극화 분산분석(ANOVA)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정당일체감	새누리당	48.73	22.74	462	74.41***
	새정연	39.96	22.84	312	
	통합진보당	38.48	25.20	25	
	정의당	42.93	22.67	14	
	기타 정당	29.38	25.13	8	
	선호정당없음	20.40	18.64	386	
이념	진보	38.06	25.26	209	35.4***
	중도	33.30	23.79	787	
	보수	48.95	23.53	209	

\* P < 0.05, \*\* P < 0.01, \*\*\* P < 0.001

태도극화가 지역주의와는 큰 관계가 없었지만 정당일체감 및 이념과의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보였다. <표 7>에 정리된 것처럼, 표 본수가 적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보면 정당지지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태도극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었으며, 선호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태도극화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응답자들의 이념과 태도극화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장 태도극화가 낮은 것은 중도 유권자인 반면,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진보 유권자들이었다.

한편, <표 8>와 <표 9>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일관투표와 새정치민

주연합에 대한 일관투표에 대한 인구학적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8> 인구학변수별 새누리당 일관투표 일원분산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성별	여성	2.34	2.76	614	1.17
	남성	2.17	2.69	596	
학력	중졸이하	3.86	2.68	227	56.93***
	고졸	2.12	2.67	507	
	전문대 이상	1.64	2.50	476	
연령	19-29세	0.95	2.03	218	57.01***
	30-39세	1.40	2.36	234	
	40-49세	1.80	2.52	257	
	50-59세	2.99	2.78	243	
	60세이상	3.91	2.69	258	
월소득	200만원미만	3.23	2.81	214	9.79***
	200~299만	2.43	2.74	199	
	300~499만	1.99	2.65	517	
	500~699만	1.86	2.61	210	
	700만원 이상	1.97	2.65	67	
거주지	서울	1.99	2.66	241	23.05***
	인천/경기	2.13	2.67	351	
	대전/세종	2.19	2.62	129	
	광주/전라	0.28	1.11	125	
	부산/울산	3.73	2.78	127	
	대구/경북	3.03	2.83	189	
	강원/제주	2.96	2.77	48	
전체		2.26	2.73	1210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9> 인구학변수별 새정치연합 일관투표 일원분산분석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성별	여성	1.87	2.55	614	0.11
	남성	1.82	2.54	596	
학력	중졸 이하	1.35	2.3172178	227	9.62***
	고졸	1.73	2.5027727	507	
	전문대 이상	2.20	2.65	476	
연령	19-29세	1.77	2.49	218	6.06***
	30-39세	2.30	2.68	234	
	40-49세	2.19	2.64	257	
	50-59세	1.61	2.44	243	
	60세 이상	1.36	2.38	258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7	2.48	214	1.66
	200-299만	1.66	2.50	199	
	300-499만	1.96	2.58	517	
	500-699만	2.06	2.66	210	
	700만원 이상	1.39	2.22	67	
거주지	서울	2.02	2.61	241	30.92***
	인천/경기	1.77	2.52	351	
	대전/세종	1.73	2.41	129	
	광주/전라	4.26	2.40	125	
	부산/울산	0.50	1.48	127	
	대구/경북	1.29	2.28	189	
	강원/제주	1.27	2.19	48	
	전체	1.84	2.55	1210	

\* P < 0.05 \*\* P < 0.01 \*\*\* P < 0.001

인구학 변수 집단별로 새누리당 일관투표를 비교한 <표 8>은 <표 6>의 태도극화 일원분산분석과 매우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일관투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학력, 저소득, 고연령 층에서 새누리당에 일관투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세대별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응답자들은 6개 지방선거 중 3.91명의 새누리 후보에 투표한 반면, 가장 낮은 20대에서는 0.95에 불과했다. 이는 연령에 따른 새누리당에 대

한 지지도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좀 더 전략적인 분할투표를 하고 있는 점도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별 편차도 컸는데, 경북지역에서 일관투표율이 3.03에 그친 반면 경남 지역의 새누리당 일관투표는 오히려 이보다 큰 3.73를 기록했다( $P < 0.05$ ). 이는 노무현 정권 이래로 야당의 꾸준한 경남 지역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남 유권자의 새누리당에 대한 충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며, 야권의 유력한 경남출신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이나 안철수 의원의 앞으로의 영남 득표력에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투표를 기준으로 일관투표를 측정했을 때에도 그 집단 간 차이는 새누리 일관투표에서 발견된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우선, 성별 간 차이는 유효하지 않았으며, 학력, 연령, 지역 등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일관투표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와는 달리, 월소득에 따른 새정치민주연합 일관투표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고학력일수록 새정치민주연합에 일관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효과는 큰 편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일관투표가 가장 낮고 30대에서 가장 높았지만 그 차이가 새누리 일관투표의 경우처럼 큰 편은 아니었다( $P < 0.001$ ).

## 2. 태도극화와 인터넷

인터넷 사용이 응답자들의 태도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태도극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정치정보와 인터넷 이용 빈도 두 변수 모두 태도극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에서 예측한 것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즉, 인터넷으로 정치정보를 얻고 이를 선거의 중요 판단자료로 활용한다고 답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평가의 차이가 클 확률이 높았다. 이는 꼭 인터넷을 정치정보 습득의 중요 매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정

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10> 태도극화 결정요인 회귀분석(OLS)

변수	비표준화(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인터넷 정치정보	3.74* (1.58)	0.07
인터넷 이용빈도	0.85* (0.4)	0.07
새누리당 지지	23.43*** (1.65)	0.46
새정치연합 지지	17.37*** (1.67)	0.31
이념	0.05 (0.39)	0
영남	-2.64 (1.45)	-0.05
호남	-4.82** (1.88)	-0.07
성별	1.47 (1.27)	0.03
연령	0.32*** (0.06)	0.21
교육	-0.37 (0.58)	-0.02
소득	-0.02 (0.2)	0

N=1200  
Adjusted R2= 0.24  
F = 35.22\*\*\*

\* Note: 상수는 생략 \* P < 0.05 \*\* P < 0.01 \*\*\* P < 0.001

이 밖에 태도극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그리고 호남과 연령이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자신의 지지정당을 밝힌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4.1%였는데, 이렇게 지지 정당이 확실한 경우가 선호정당이 없다고 밝힌 32.0%의 무당파에 비해 태도극화가 강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태도극화가 약하고 고연령층에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념이나 성별, 교육, 소득 변수는 태도극화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통제변수 중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 것은 지역주의 변수였다. 지역주의가 강한 영남이나 호남 출신 유권자일수록 정당일체감이 강하고, 따라서 태도극화 역시 강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이 회귀분

석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영남지역 유권자들의 태도극화 수준은 다른 지역 유권자들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으며,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태도극화는 오히려 타 지역보다 4.8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태도극화 일원분산분석을 보면 호남 유권자들의 태도극화 점수가 상당히 낮고, 영남 유권자의 태도극화 수준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태도극화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준화계수를 중심으로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 두 개의 인터넷 관련 변수 모두 표준화 계수는 0.07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호남 지역변수의 영향력과 비슷한 정도이다. 반면 태도극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당일체감 변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연령 변수가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당일체감을 제외한 다른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연령변수이며, 나머지 유의미한 세 변수 — 인터넷 정치정보, 인터넷 이용 빈도, 그리고 호남 — 는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 2. 일관투표 결정요인 분석

<표 11>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일관투표 및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일관투표를 설명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했다.<sup>2)</sup>

<가설 2>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일관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누리당 일관투표 모델은 이 가설의 예측을 만족시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모델에서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새누리당 모델에서 인터넷 정치정보는 일관투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이용 빈도 변수는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두

2) 앞의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던 태도극화 변수가, 일관투표 결정요인 모형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과 함께 같은 독립변수로 취급되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절에서 사용된 두 회귀 분석에서 각 독립변수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분산팽창계수의 최댓값은 2.29를 넘지 않아서 일반적인 다중공선성 판정 기준인 10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일관투표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모델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즉,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자주 이용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정치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선거에서의 판단에 중요자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더 큰 지지를 보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1> 일관투표 결정요인 회귀분석(OLS)

	새누리 일관투표		새정치 일관투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태도극화	0.01*** (0)	0.1	0 (0)	0.01
인터넷 정치정보	-0.36*** (0.14)	-0.06	0.22 (0.14)	0.04
인터넷 이용빈도	-0.04 (0.03)	-0.03	0.06 (0.03)	0.04
새누리당	2.56*** (0.15)	0.46	-1.43*** (0.15)	-0.27
새정치연합	-0.8*** (0.15)	-0.13	2.43*** (0.15)	0.42
이념	0.17*** (0.03)	0.11	-0.12*** (0.03)	-0.08
영남	0.45*** (0.12)	0.08	-0.24 (0.13)	-0.04
호남	-0.47*** (0.16)	-0.06	0.86*** (0.16)	0.12
성별	-0.14 (0.11)	-0.03	-0.02 (0.11)	0
연령	0.02*** (0.01)	0.1	0.02*** (0.01)	0.15
교육	0 (0.05)	0	0.09 (0.05)	0.05
월수입	0 (0.02)	0	-0.01 (0.02)	-0.02
N=1200		N=1200		
Adjusted R2= 0.54		Adjusted R2 = 0.47		
F = 117.61		F=89.56		

\* Note: 상수는 생략 \* P < 0.05 \*\* P < 0.01 \*\*\* P < 0.001

태도극화가 새누리당에 대한 일관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태도극화가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3> 참조). 따라서 태도극화가 높은 사람들은 새누리당에 대한 일관투표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당일체감과 이념 변수는 모두 일관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보수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새누리당에, 진보이념에 가까울수록 새정치민주연합에 일관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다. 역시 지역주의 변수도 양 당에 대한 일관투표에 영향을 끼쳤는데, 다만 영남 지역변수는 새정치민주연합 일관투표와는 별다른 의미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영남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일관투표의 확률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성별, 연령, 교육, 소득 등 인구학 변수 중에서는 연령만이 양 당에 대한 일관투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양당 모두에 대한 일관투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세(표준편차 14.7)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경우는 42.6세(표준편차 14.6)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었다( $P < 0.001$ ). 따라서 연령 변수의 경우 새누리 일관투표 모형에는 정방향의 관계를, 새정치민주연합 모형에서는 역방향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추측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모형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관투표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토론 및 맺음말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다. 첫째, 인터넷 사용이 태도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과, 둘째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수정당에 비판적이고 진보정당에 우호적이라는 일반적 평가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먼저 인터넷 사용은 태도극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앞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런데 정치정보 사용을 기준으로 응



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 집단의 태도극화 점수를 단순 비교했을 때는 인터넷 사용집단의 평균이 34.2, 비사용 집단의 평균이 38.3으로 오히려 비사용 집단의 태도극화 점수가 높았다( $P < 0.001$ ). 그러나 태도극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여 비교한 <표 10>의 회귀분석에서는 그 영향이 반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사용이 연령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년층, 특히 60세 이상의 응답자에서 태도극화가 상당히 높았는데(<표 6> 참조), 이들이 인터넷 정치정보 비사용자 집단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이 집단의 태도극화 평균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인터넷 정치정보 사용집단의 평균연령은 34.5세인 반면 비사용집단은 51.1세로 16.6세의 차이가 났다( $P < 0.001$ ). 따라서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과 정당일체감을 통제한 결과, 나이가 비슷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같다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인터넷의 정치정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태도극화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의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당시 연구에서는 정치대화에 빈번하게 참여하고 SNS를 자주 사용하는 유권자들의 태도극화가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사실상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이상신 2013). 이러한 결론은 인터넷이 정치적 공론장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낙관론자들의 기대에 현실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순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경우에는(김병문 2013; 박기덕 2007), 각 대통령 후보들이 경쟁하는 대선 기간에 유권자들의 태도극화는 정당일체감뿐만 아니라 후보 개인들에 대한 평가가 합해져서 더욱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가 한국에서의 태도극화 연구에 대해 갖는 의의는,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지고 정당간 경쟁의 치열함에 있어서도 그 정도가 덜한 지방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즉, 태도극화가 일시적으로 선거 과정

에서 유권자들의 감정이 고조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분석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복합적이었다. 인터넷 정치정보변수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유의미하게 낮췄으나,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연합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표 11>). 인터넷 사용자들의 성향은 비교적 진보적이고, 따라서 야당이 여당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동원에 유리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박연주 2014; 이준한 2014).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이 보여주는 것은 온라인에서의 진보정당의 우위를 예상하는 변화가설의 적실성이 점차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기존 연구들과 이 논문이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이 논문의 회귀분석에서 사용한 두 인터넷 변수 중, 인터넷 이용빈도 변수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일관투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더 핵심적이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보수·진보 간 세력 변화의 조짐은 통합진보당의 내분 및 계속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과 무기력증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보다도 한국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이미 보편적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인 82.1%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이는 젊고 진보적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의 여론을 주도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시대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이상신·김한나 2011; Fong et al. 2001; Norris 2001).

그러나 회귀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터넷을 중요한 정치정보의 출처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낮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변화가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우위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며, 멀지 않은 시기에 온라인에서의 여론 지형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정상화가설이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기존연구 검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진보우위 가설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이 변화가설 혹은 진보우위 가설의 유효기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정치정보의 주요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일관투표의 경향이 낮았다. 이것은 진보우위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나, 이 새누리당에 대한 낮은 지지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높은 지지로 연결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 또한 <표 11>의 회귀분석은 보여주고 있다. 즉, 현 단계에서의 한국 인터넷은 ‘진보우위’라기보다는 ‘보수약세’라고 표현하는 편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SNS를 통한 노년층의 인터넷 유입 추세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일간베스트’ 등의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의 등장을 고려하면 이 보수약세의 경향이 보수우위로 돌아설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의사소통은 시민들의 기존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태도극화의 가설이 다시 확인되었고, 둘째, 한국의 온라인 여론은 아직까지는 보수정당에 비판적이라는 변화가설의 예측이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진보정당의 우위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온라인 여론은 매우 역동적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3, 4년 사이에 한국의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매체는 트위터에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새누리당이 온라인에서의 불리함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변화하는 인터넷과 뉴미디어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 온라인에서의 진보우위가 약해지면서 지금까지의 소극적 대응으로는 제대로 선거에 임할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의 변화를 먼저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선도적으로 유도하여 캠페인에 이용할 수 있는 정당이 앞으로의 온라인 여론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4a). “인터넷 정치집단의 형성과 참여: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제3호, pp. 161-84.
- \_\_\_\_\_ (2004b).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권. 제2호, pp. 143-65.
- \_\_\_\_\_ (2008).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2호, pp. 75-102.
- \_\_\_\_\_ (2010). “2010 지방선거에서의 분할투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4호, pp. 1-26.
- \_\_\_\_\_ (2012).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1호, pp. 171-93.
- 경제희·김재한 (1999).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략적 투표자.” 『한국과 국제정치』. 제15권. 제1호, pp. 65-95.
- 김병문 (2013).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pp. 189-208.
- 김승수·김지현·안유림·함정현 (2008). “온라인 토론의 집단극화현상의 시기별 분석: 한반도 대운하 찬반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용철 (2008). “촛불시위의 배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용철·윤성이 (2000).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3호, pp. 129-47.
- \_\_\_\_\_ (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 김용호 (2004). “네티즌 포폴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인가?: 노사모 사례 연구.” 정보기술과 정치·사회의 변화 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 김윤실·윤종빈 (2012).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나타난 SNS의 영향력 분석.” 『의정논총』. 제7권. 제1호, pp. 95-115.
- 김은미·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한국언론학회보』. 제50권. 제4호, pp. 65-94.
- 김형철 (2012).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2권. 제2호, pp. 51-86.
- 나은영 (2006).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익명성,

- 상호작용성 및 집단극화(極化)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2권. 제1호, pp. 93-127.
- 나은영·차유리 (2012). “인터넷 집단극화를 결정하는 요인들: 공론장 익명성과 네트워크 균중성 및 개인적,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제1호, pp. 103-21.
- 노정규·민영 (2012).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2호, pp. 226-48.
- 박기덕 (2007). “한국의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논쟁: 쟁점의 본질과 효율적 대안.” 『한국정치연구』. 제16권. 제1호, pp. 111-40.
- 박상호 (2012).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8권. 여름호, pp. 55-73.
- \_\_\_\_\_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제2호, pp. 113-34.
- 박상훈 (2013).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개정판. 서울: 후마니타스.
- 박연주 (2014). “그들은 어떻게 카카오톡을 카더라톡으로 변질시켰나?” 서울: 민주정책연구원.
- 박찬욱 (2004).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3권. 제2호, pp. 39-85.
- 박창문·조재욱 (2013). “SNS의 정치적 동원기능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2호, pp. 187-220.
- 송경재 (2008). “2008년 촛불과 네트워크형 시민운동 전망.” 『시민과 세계』. 제14권, pp. 156-64.
- \_\_\_\_\_ (2009). “웹 2.0 정치 UCC와 전자민주주의: 정당, 선거 그리고 촛불시민운동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담론 201』. 제11권. 제4호, pp. 63-91.
- 윤성이 (2001).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력: 이상과 현실.” 『사회이론』. 제20권, pp. 37-61.
- \_\_\_\_\_ (2003). “16대 대통령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제37권. 제3호, pp. 71-87.
- \_\_\_\_\_ (2007). “인터넷 선거운동의 효과.”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서울.
- 이상신 (2012). “웹 2.0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박찬욱·김지윤·우정엽 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_\_\_\_\_ (2013). “18대 대선과 태도극화: 정치적 소통은 분열을 심화시키는가?” 『한

- 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pp. 217-42.
- 이상신·김한나 (2011). “전자투표와 정보격차: 디지털 활용성 격차가 전자투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제2호, pp. 5-31.
- 이준한 (2014). “2012년 대통령선거와 뉴 미디어의 정치적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6권. 제1호, pp. 209-40.
- 장덕진 (2011). “트위터 공간의 한국 정치.” 『언론정보연구』. 제48권. 제2호, pp. 80-107.
- 장덕진·김기훈 (2011).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 제48권. 제11호, pp. 59-86.
- 정일권 (2012). “SNS를 통한 정치참여.” 한국언론학회 학술회의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발표논문.
- 조성대 (2013).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교차성과 정치참여.”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2호, pp. 157-85.
- 조진만·최준영 (2006).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 제40권. 제1호, pp. 71-90.
- 조희정·박설아 (2012).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46권. 제1호, pp. 113-39.
- 최윤정·이종혁 (2012). “인터넷 토론에서 이견(異見) 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이르는 경로 분석.” 『한국언론학회보』. 제56권. 제2호, pp. 301-30.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2013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상익 (2014). “선거구 경쟁도와 전략적 분할투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사례로.” 『한국정치연구』. 제23권. 제2호, pp. 161-84.
- Baum, Matthew A., & Tim Groeling (2008). “New Media and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Vol. 25. No. 4, pp. 345-365.
- Davis, Richard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rrell, Henry (2012). “The Consequences of the Internet for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5. No. 1, pp. 35-52.
- Fazio, Russel H., Jeaw-mei Chen, Elizabeth C. McDonel, & Steven J. Sherman (1982). “Attitude Accessibility,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and the Strength of the Object-Evaluation Assoc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8. No. 4, pp. 339-357.

- Fong, Eric, Barry Wellman, Melissa Kew, & Rima Wilkes (2001). "Correlates of the Digital Divide: Individual, Household and Spatial Variation." *In Report to Office of Learning Technologies*.
- Grossman, Lawrence K (1995). *The Electronic Republic: Reshaping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Viking.
- Gruzd, Anatoliy, & Jeffrey Roy (2014). "Investigating Political Polarization on Twitter: A Canadian Perspective." *Policy & Internet*. Vol. 6. No. 1, pp. 28-45.
- Gutmann, Amy, & Dennis F. Thompson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 Iyengar, Shanto (2011). *Media Politics: A Citizen's Guide*. 2nd ed. New York: W. W. Norton & Co.
- Iyengar, Shanto, & Kyu S. Hahn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 1, pp. 19-39.
- Lawrence, Eric, John Sides, & Henry Farrell (2010). "Self-Segregation or Deliberation? Blog Readership, Participation, and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8. No. 01, pp. 141-157.
- Lord, Charles G., Lee Ross, & Mark R. Leppe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No. 11, pp. 2098-2109.
- Miller, Arthur G., John W. McHoskey, Cynthia M. Bane, & Timothy G. Dowd (1993). "The Attitude Polarization Phenomenon: Role of Response Measure, Attitude Extremity,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Reported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4, pp. 561-574.
- Muhlberger, Peter (2003). "Political Values, Political Attitudes, and Attitude Polarization in Internet Political Discussion: Political Transformation or Politics as Usual?" *Communications: Th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28. No. 2. pp. 107-134.
- Nickerson, Raymond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 No. 2, pp. 175-220.

- Norris, Pippa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or, Markus (2013).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6. No. 1, pp. 101-127.
- Rash, Wayne (1997). *Politics on the Nets. Wiring the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Stroud, Natalie Jomini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60. No. 3, pp. 556-576.
- Sunstein, Cass R (2007). *Republic.com 2.0*.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jcieszak, Magdalena (2011). "Deliber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61. No. 4, pp. 596-617.
- Wojcieszak, Magdalena E., Young Min Baek, & Michael X. Delli Carpini (2010).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deological Strength and the Processes Leading from Deliberation to Political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22. No. 2, pp. 154-180.
- Wojcieszak, Magdalena E., & Diana C. Mutz (2009). "Online Groups and Political Discourse: Do Online Discussion Spaces Facilitate Exposure to Political Disagre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9. No. 1, pp. 40-56.
- Xenos, Michael, & Patricia Moy (2007). "Direct and Differential Effects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7. No. 4, pp. 704-718.
- 정용인 (2012). "트위터 영향력 줄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뜬다." 『경향신문』. 8월 18일.
- 허재현 (2011). "트위터와 투표의 상관관계, 그래픽 자료 첫 공개." 『한겨레 신문』. 5월 26일.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23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 **Internet, Attitude Polarization, and the Local Elections: An Analysis of the 6th Local Election in South Korea**

**Sang Sin Le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ongsil Univ.)

This research aims to see how the internet and new media influence the election and the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 via an analysis of survey data that is collected after the 6th local elections in 2014. The first hypothesis is that usage of internet intensifies attitude polarization. The second hypothesis is to reconfirm 'change hypothesis' that maintains the liberal domination of online public opinion. With OLS analysi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1) the communication over the internet does increase the attitude polarization, which is operationally defined as the difference in the evaluations between the most favored and the least favored political parties; and that (2) though the public opinion in Korean cyberspace is still against the Saenuri Party, the conservative ruling party of South Korea, this liberal superiority seems unstable.

- Key words: Attitude Polarization, Internet, South Korean Local Elections, Change Hypothesis, Normalization Hypothesis